

시설퇴소청년을 위해서는 어떠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할까?



본 조사에서 '시설퇴소청년(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은 ①「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아동그룹홈)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여 ②「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③「소년법」상 보호시설(소년원)을 퇴소한 후 자립을 목적으로 지원기관(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의 사후관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만 19세 이상 청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설퇴소청년을 위해서는 어떠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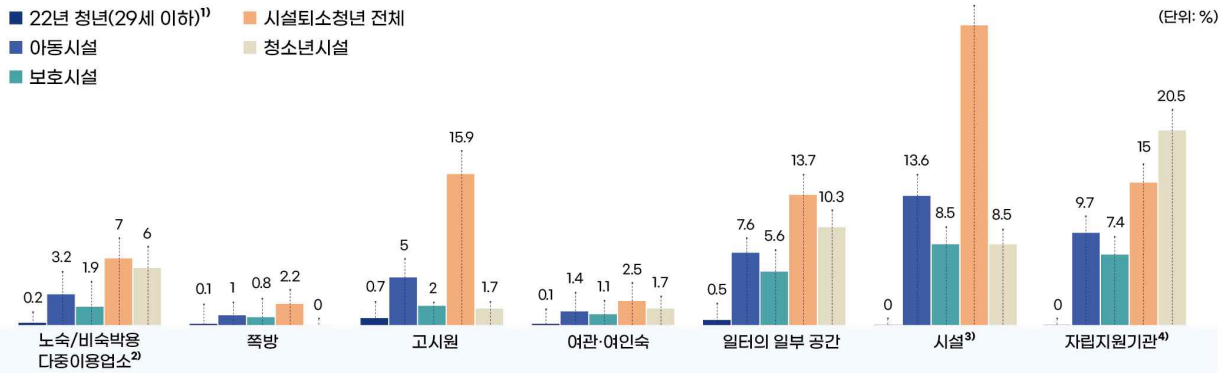
주요 결과 ❶ 주거

불안정한 주거상황

가정 외 주거유형 경험

시설퇴소청년 응답자의 27.4%는 최근 1년간 집이 아닌 곳에서 한 달 이상 생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집 이외의 장소에서 한 달 이상 생활한 경험(중복응답)



주: 1) '22년 청년 자료의 결격값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

2)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PC방, 만화방, 찜질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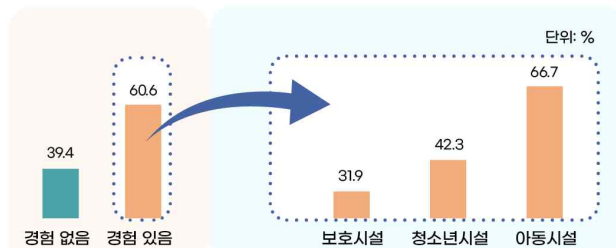
3) 양육시설, 그룹홈, 쉼터 등

4)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생활관, 희망디딤돌 센터 등이며 '22년 청년 대상 조사에는 해당 항목 없음.

주거지원 수혜율

LH 등의 지원(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으로 현재 주거지를 마련한 경우는 60.6%임. 시설 유형별 주거지원 수혜율을 보면 아동시설 퇴소청년 66.7%, 청소년시설 42.3%,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31.9%임.

LH 등에서 주거지원을 받은 경험



시설퇴소청년을 위해서는 어떠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할까?

주요 결과 ② 경제

열악한 근로·경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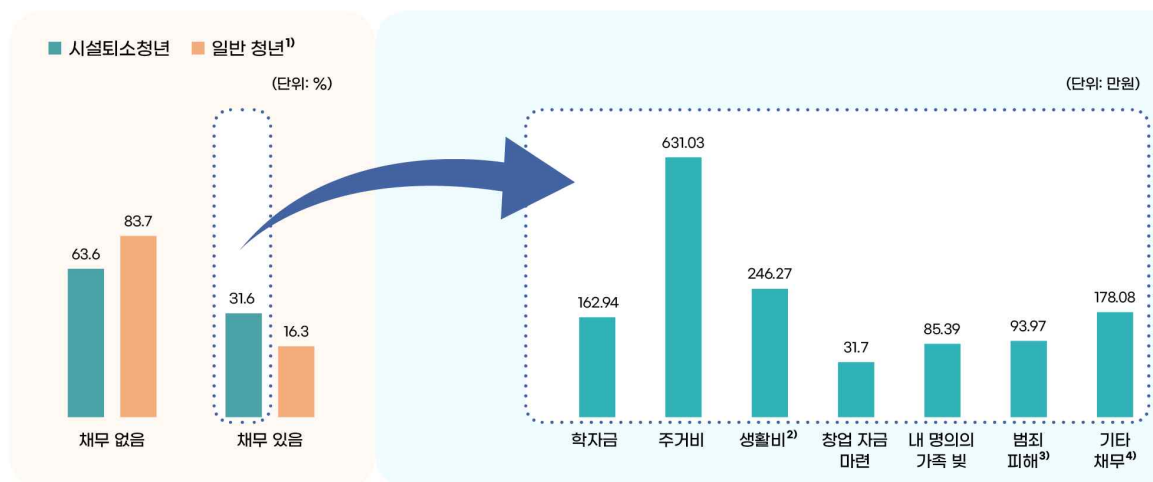
☞ 근로 상황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야간·주말·초과 근무 경험 정도는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84.7%로 매우 높았고, 그 외 저녁 근무나 8시간 이상 초과 근무, 주말·휴일 근무는 각각 67.1%, 61%, 50.6%로 나타남.

☞ 채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중 채무가 있는 경우는 36.4%로 일반 청년들(16.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음.

채무 여부 및 평균 금액



주: 1) 일반청년 응답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세정 외, 2022) 원자료에 제시된 가중치율을 적용한 값이며 청년 (개인) 부채임.

2)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햇살론, 유스대출 포함)

3) 보이스피싱, 명의 도용, 소액 결제 등

4) 주식, 가상자산 투자 목적의 채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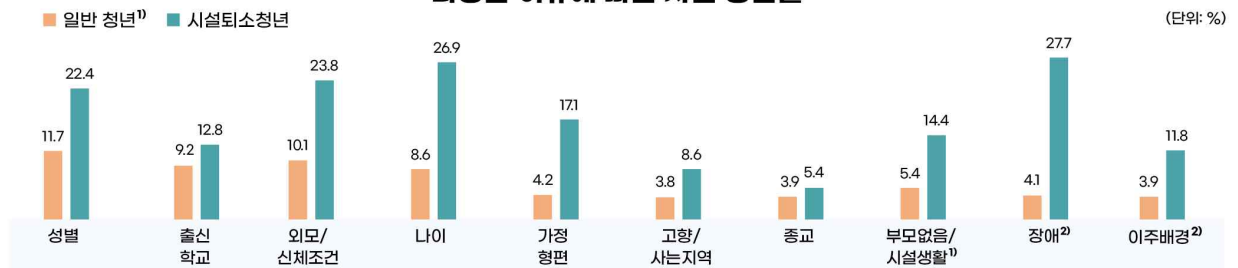
시설퇴소청년을 위해서는 어떠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할까?

주요 결과 ③ 인권

다양한 이유에 따른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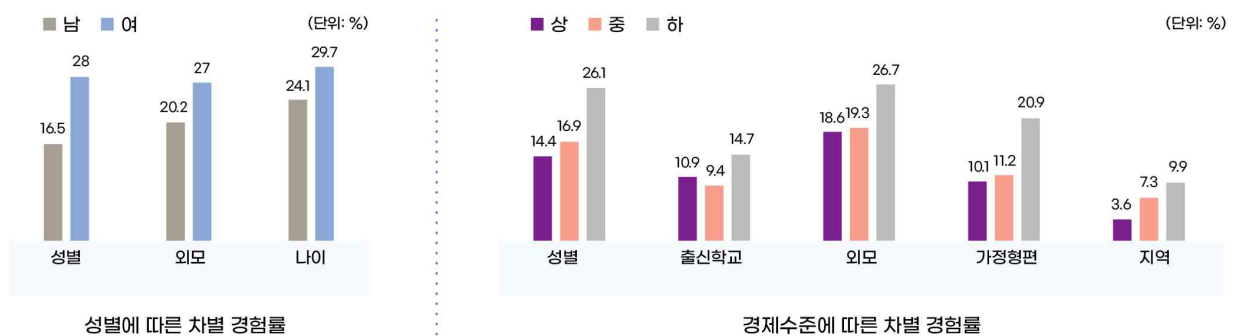
📌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은 일반청년들에 비해 장애, 나이, 외모·신체조건, 성별 등에 따른 차별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남.

다양한 이유에 따른 차별 경험률



주: 1) 일반청년은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김기현 외, 2023)에 참여한 29세 이하 청년들의 응답에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해당자만 응답.

시설퇴소청년들의 성별 및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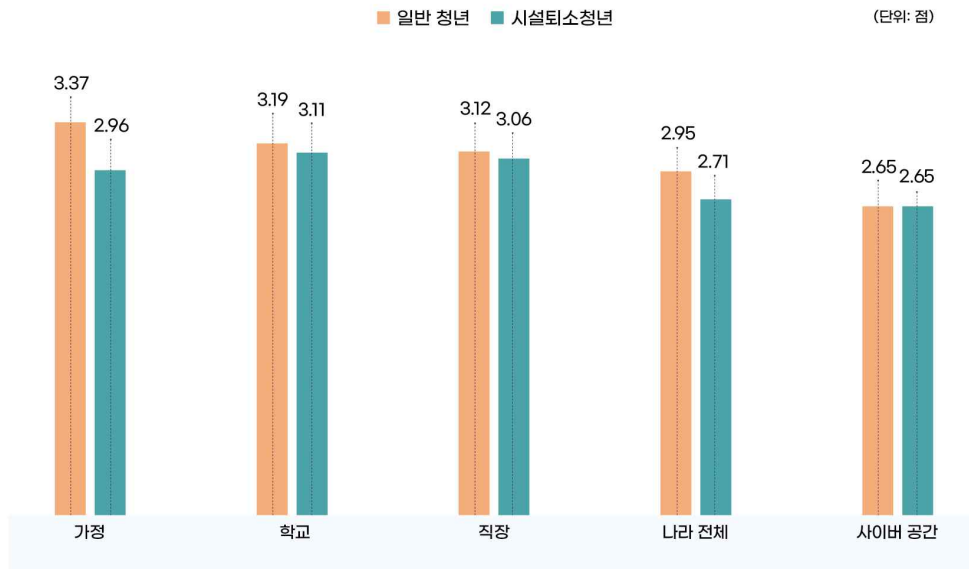
시설퇴소청년을 위해서는 어떠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할까?

주요 결과 ③ 인권

상대적으로 낮은 인권 존중 경험 정도

자신의 인권이 어느 정도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시설퇴소청년들은 일반청년들에 비해 사이버 공간을 제외하고 가정, 학교, 직장, 나라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점을 보였음. 특히 우리나라 전체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정·학교·직장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위치를 짐작케 함.

각 영역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4점 만점)



주: 일반청년 응답은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김기현 외, 2023)에 참여한 29세 이하 청년들의 응답에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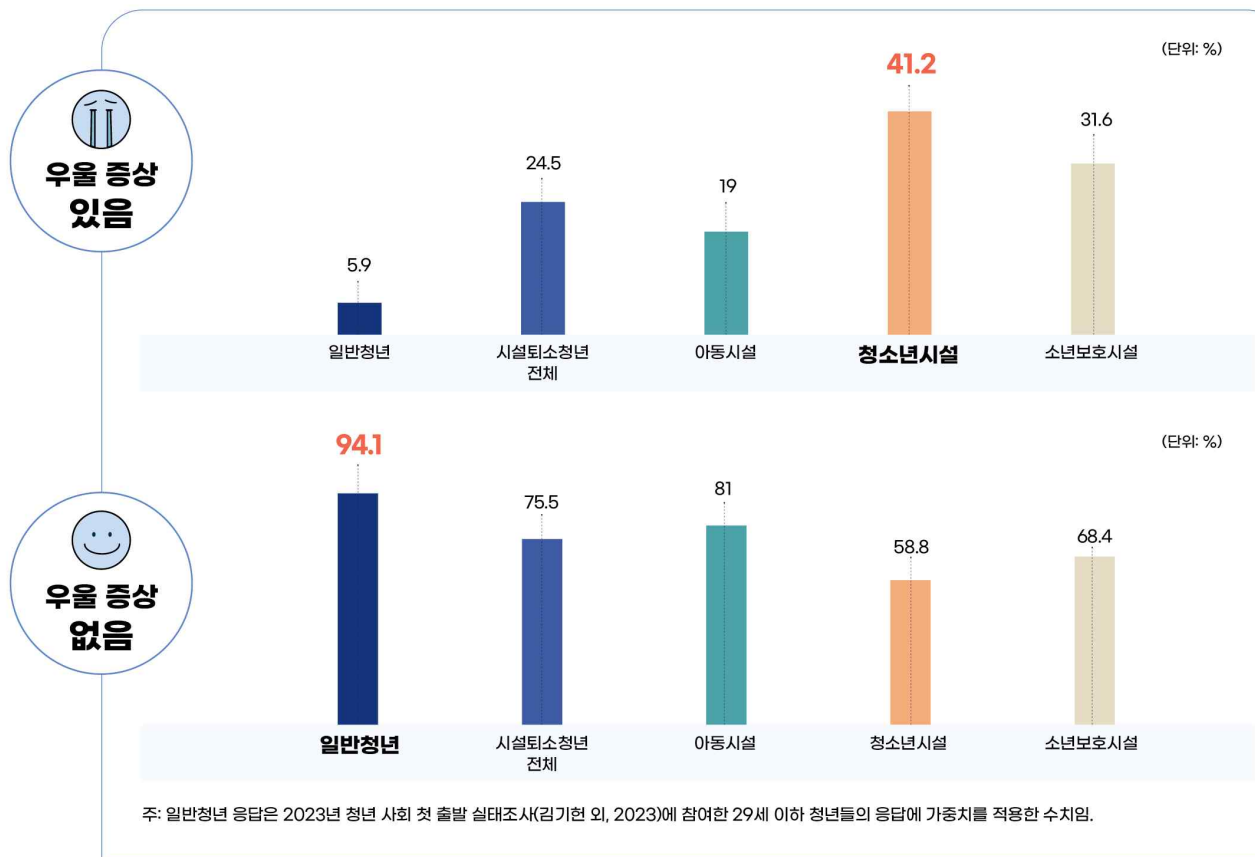
시설퇴소청년을 위해서는 어떠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할까?

주요 결과 ④ 심리·정서

상대적으로 높은 우울 증상

📌 시설퇴소청년 중 24.5%가 우울 증상을 보여 일반청년(5.9%)보다 약 4배 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냄.

-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시설-소년보호시설-아동시설 순으로 그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청소년시설 퇴소자의 경우 우울 증상을 지닌 경우가 41.2%로 나타남.



시설퇴소청년을 위해서는 어떠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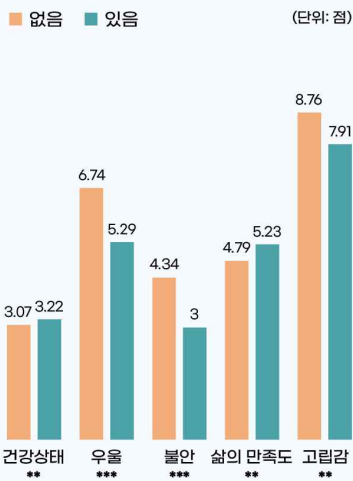
주요 결과 ④ 심리·정서

공적지원 수급 여부와 심리·정서 간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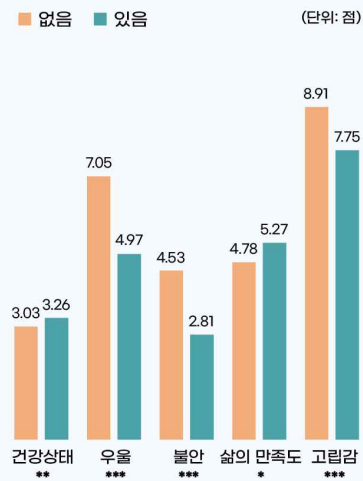
가명정보 결합 자료* 분석 결과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등 공적지원 수급 및 이용 여부는 심리·정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음.

-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공적 지원을 받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우울, 불안, 고립감 정도는 낮고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는 양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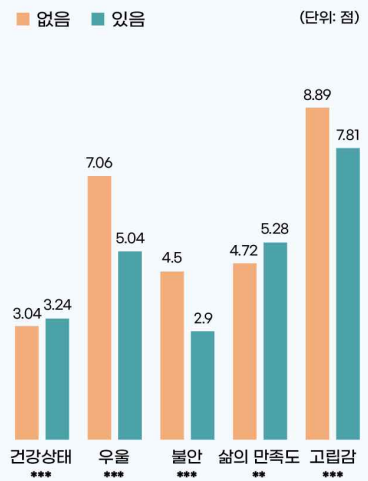
디딤씨앗통장 이용 경험



자립정착금 수급 경험



자립수당 수급 경험



* 가명정보 결합 자료 : 통계분석을 목적으로 시설퇴소 자립청년의 1차년도(2002년) 실태조사 자료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 대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각각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후 두 자료를 결합한 자료

주: 1) *p < .05, **p < .01, ***p < .001

2) 시설퇴소청년들의 심리·정서에 대한 응답은 1차년도(2002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함.

3) 각 심리·정서 영역마다 상이한 점수 구간으로 영역간 비교는 불가하며 동일 영역 내에서 수급 여부에 따른 비교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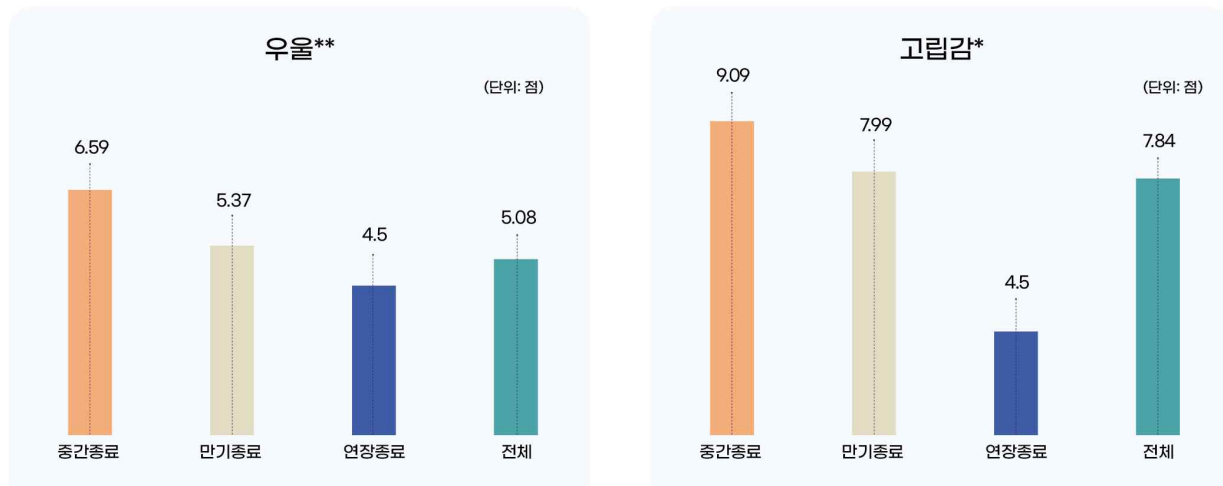
시설퇴소청년을 위해서는 어떠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할까?

주요 결과 ④ 심리·정서

보호종료 유형 및 자립기간과 심리·정서 간 관련성

- 가명정보 결합 자료* 분석 결과 아동양육시설에서의 보호가 중간에 종료된 청년들은 연장보호 후 퇴소한 청년들에 비해 우울, 고립감이 유의하게 높았음.
- 자립수당 수급 연차가 2~3년 이상인 청년들은 1년 미만인 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우울이나 고립감을 보임.

시설퇴소청년들의 보호종료 유형에 따른 심리·정서 상태



* 가명정보 결합 자료 : 통계분석을 목적으로 시설퇴소 자립청년의 1차년도(2002년) 실태조사 자료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 대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각각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후 두 자료를 결합한 자료

주: 1) *p < .05, **p < .01, ***p < .001

2) 시설퇴소청년들의 심리·정서에 대한 응답은 1차년도(2022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함.

3) 각 심리·정서 영역마다 상이한 점수 구간으로 영역간 비교는 불가하며 동일 영역 내에서 수급 여부에 따른 비교만 가능

시설퇴소청년을 위해서는 어떠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할까?

대응 방안 ① 주거

☞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의 확대

-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의 확대(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 아동복지시설 중도퇴소 청년, 무의탁 보호소년 등도 포함)
- 지자체와 자립지원기관 등의 내부 심의기구에서 평가한 개인의 취약성과 위기도를 반영하여 지원

☞ 지역 기반의 주거지원사업 추진

- 주택공급 외에 지역 기반의 입주 지원(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주거환경 개선,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 월세지원 등) 추진 및 지원대상의 확대

대응 방안 ② 경제

☞ 근로 권익 보호 강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및 노동권익센터를 통한 무료상담 및 권리 구제
-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행정절차 지원
- 근로기준법 준수 영세사업장에 대한 한시적 자비 부담률 완화

☞ 관계기반 금융생활 지원제도 강화

- 소득·지출·부채 상태 등 금융생활 전반에 걸쳐 맞춤형 경제 교육확대
- 정부 주도의 '관계기반 금융 모델 사례' 시범운영 및 제도화

대응 방안 ③ 인권

☞ 시설퇴소청년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

- 시설퇴소청년들이 사회에서 다양하게 부딪힐 수 있는 차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및 대책 마련
-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당사자활동 확대 및 참여권 보장,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통한 권익보호

대응 방안 ④ 심리·정서

☞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확대

- 심리·정서 상태의 수준에 따라 지원 횟수나 기간을 보다 장기적으로 개선
-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개입의 전문화

☞ 공적지원 수급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한 심리·정서 안정화

- 개인의 심리·정서 안정을 위해서는 취약성·위기도를 반영하여 아동복지시설 외 타 복지시설 퇴소청년들에게도 자산형성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공적지원 확대 및 강화 필요

☞ 자립위기에 따른 맞춤형 자립지원

- 보호종료 이후 사후관리 강화 (종료 이후 일정기간 안정적인 보호 및 지원 제공) 및 중간 종료 이후라도 재임소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자립 2~3년차에 대한 심리·정서 및 사회적 관계망 대한 점검 및 지원 강화
- 정부 주도의 '관계기반 금융 모델 사례' 시범운영 및 제도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시설퇴소청년을 위해서는 어떠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할까?

백혜정 선임연구위원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김승경 선임연구위원